

학문절벽의 시대, 비정규직 연구자의 안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실태조사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수, 사회학 전공

freeox@hansung.ac.kr

- I. 머리말
- II. 연구자의 정의와 한국 연구 위기 현황
- III. 조사 설계와 내용 및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IV. 조사 결과 분석
- V. 맺음말

I. 머리말

한국 사회는 세계적 저출산을 기록하며 소위 ‘인구절벽’의 시대를 맞고 있다. 교육의 맥락에서 보면, 인구절벽은 학령인구의 급감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좀 더 연장해서 보면 학문재생산이 지속되기 어려운 ‘학문절벽(academic deadlock)’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대학원 입학미달 사태도 뚜렷해졌고 최근에는 서울대 사회과학대에 이어 공대마저 미달 사태를 빚고 있다.¹⁾

한국의 학문재생산체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엄격히 말해 학문재생산의 단절 위기가 인구급감의 결과만은 아니다. 지난 1995년 김영삼 정부가 실시한 5·31 대학설립준칙주의로 확장일로였던 대학 구조와는 반비례하여 위축되어온 산업구조와 노동시장과 불균형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 불균형으로 인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래로 강제적으로 대학 규모를 줄이고 있고, 그 일환으로 시간강사법 개정안이 나왔던 2011년에서 2017년 사이에 대학 시간강사의 규모가 112,087명에서 76,164명으로 3만6천명 가까이 줄어들었다.²⁾ 그런 과정에서 교육과 연구의 전망을 내다볼 수 없게 된 연구자들이 연구를 중단하거나 신진박사가 되어도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진행되면서 학문재생산이 지속가능하지 않게 되어 학문절벽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학계나 경제계, 정계 등에서는 한국 미래 사회를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식기반사회로 예측하며, 연구자의 질적 양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외치고 있고, R&D 재정도 확대³⁾해야 함을 강조하고

* 이 글은 국회토론회 “학문절벽의 시대, 비정규 교수·연구자의 위기 실태와 극복 방안”(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주관, 2018. 6. 21)에 실린 논문을 재집필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이 글을 집필하는 데 도움을 준 배성인(한신대), 임순광(경북대), 박배균(서울대), 배석만(고려대), 최윤(고려대), 김상현(서울시립대)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열심히 연구보조를 해준 김태원 학생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논문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준 익명의 훌륭한 심사자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1) 「서울대 공대 대학원 미달…… 젊은 연구자들이 흔들린다」, 《서울경제》, 2018년 6월 28일자(<http://www.sedaily.com/NewsView/1S0ZH9VLE5>).

2) 이성은,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및 시간강사 등 현황 분석」(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 주최 발표문, 2018), 7쪽.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는 교육부가 대학시간강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의 일환으로 만들었다.

3) 「쫓그라든 R&D 지원, “글로벌 시장 고려해 지속 늘려야”」, 《전자신문》, 2018년 4월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더 많은 공학적 전문지식이 아니라, 상상력과 성찰성, 협력적 인성과 지성을 갖춘 인문학이나 튼튼한 기초학문을 더 필요로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2005년 안삼환 등은 “인문학 활용 국가발전 전략 수립 연구”를 통하여 세계적 수준에 부합하며, 한국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 수립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⁴⁾ 또한 황용수 등은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 제도를 비교연구하여 제도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⁵⁾ 김종호 등은 “국가연구개발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⁶⁾ 등을 통하여 연구비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2000년대 들어 정치 민주화의 일정한 성취와 경제적 성장에 부응하는 학문정책을 수립하고 세계적 수준의 학문연구 제도를 만들어 나가자는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학문 정책을 재정립하고 연구자의 재생산 구조를 점검하기도 전에 2010년 이후 교육 위기가 도래했다. 상기 정부 주도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이 추진된 결과 대학 강사들의 퇴출 문제가 교육계의 일대 문제로 되었다. 특히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사업>⁷⁾ 진행 과정에서 양산된 대학 교육을 둘러싼 문제점들이 적지 않은 보고서에서 지적되어 왔다.⁸⁾ 그러나 정작 고등교육의 위기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학문재생산 상황에 관한 진단이나 문제들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언급만 되고 있을 뿐 충분히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지는 않다.⁹⁾

17일자(https://member.etnews.com/member/login.html?return_url=http://www.etnews.com/news/article.html?id=20180417000239).

- 4) 안삼환 · 강내희 · 심광현 · 김정인, 「인문학 활용 국가발전전략 수립 연구」(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총서, 2005).
- 5) 황용수 외,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03).
- 6) 김종호 · 김세훈 · 황필선, 「국가연구개발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아태연구』 제16권 제1호(2009).
- 7)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감축실적으로 미인정된 보건계열 등의 학과, 전공 등까지 포함한 실제 감원 인원은 5만 6천 명에 달했다. 최은옥, 「대학 구조개혁 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 방안,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2017).
- 8) 김귀옥,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 방안,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2017).
- 9) 대학원에서 교수와 대학원생 간의 각종 갈등과 사건 · 사고가 발생하고, 특히 2013년 ‘인분교수사건’마저 터지면서 대학원생의 연구환경과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분출된 바 있다. 이인규,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15).

현재 우리의 학문 현장에는 어떤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가? 현재의 연구 생태계 속에 연구자들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가? 특히 전임 교수직이나 전임 연구직을 갖고 있지 못한 다양한 비정규직의 연구자들은 연구자로서 최소한의 학문의 자유, 연구의 자율성을 누리고 있는가? 또한 정부의 연구 정책, 실례로서 한국연구재단 등의 학문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대한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연구자들이 희망하는 것은 개인차는 있겠으나 '정규직'으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과연 그들이 자신을 포함한 비정규직 연구자 문제를 해결할 최소한의 방안을 무엇으로 보는가를 비정규직 연구자들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비정규직 연구자들의 문제의식, 그들의 경험에 따른 학문정책에 대한 문제와 해결책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오랫동안 질적 연구를 해왔으나, 좀 더 넓게 조망하기 위하여 시론적 수준에서 설문조사를 통하여 문제에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질적 연구를 통하여 세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II. 연구자의 정의와 한국 연구 위기 현황

우선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①항은 모든 국민이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바로 연구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자에 대해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학술진흥법」 제2조 1항은 연구자를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발견시키고, 그 생산·발견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사람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그럼 법적으로 연구자에는 어떤 사람들이 속하게 되는가? 여러 가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학술진흥법」 2조 5항에 따르면 연구자에는 「고등교육법」에서 말하는 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나 겸임교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이나 사내(社內)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대한민국학술원법」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라 학술활동 또는 예술창작활동을 지원받는 과학자 및 예술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박사학위자,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원 및 연구원 등을 가리킨다. 한마디로 광의의 연구자는 학문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연구자란 대학 교원 일체를 포함하는 큰 개념이며, 대학의 교수나 강사는 모두 연구자이되, 연구자 중에는 교육을 담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¹⁰⁾ 다시 말해 비정규직 교수는 모두 비정규직 연구자라 할 수 있되, 비정규직 연구자 중에는 강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한편 「학술진흥법」 제3조는 정부가 연구자들에게 “학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며,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근본적으로 연구자들이 학술 진흥에 따른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술의 정의에서 비롯되듯, 학술 행위는 개인의 지적 호기심 충족에서 머물지 않고, 이론과 방법의 탐구를 통하여 학문적, 사회적으로 소통되는 지식과 방법론을 생산하는 사회적 행위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학술 행위는 현재 지식 체계나 사회 제도, 문화, 과학기술 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현재의 지식이나 사회 제도, 규범이나 문화, 과학기술이 갖고 있는 문제와 한계 등을 부단히 비판하고 거짓이나 모순을 폭로하며 새로운 것들을 찾아나가는 미래 지향적 지식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한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 국가나 사회의 요구에 순응하는 지식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미래 지향의 가치를 가진 비판적 지식에 대해서도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고 연구 지원을 할 때 미래를 위한 새로운 지식이 준비될 수 있다.

그런데 법제도적으로 보면, 학문의 자유 보장과 연구자에 대한 연구 지원 정책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헌법 외의 하위 법률에서 학문의

10) 박사학위 준비생은 일반적으로 박사과정생으로 통칭되고 있다. 박사과정생은 “지도 교수 및 동료와의 학문적 교류와 협력, 상호작용을 통해서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고, 박사과정의 삶에 통합되며, 독립적인 연구자로서 성장한다. 요구되는 역할과 학과 및 학문 사회와의 내면적 균형과 통합을 이룸으로써 학문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졸업 이후 학문 세계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고 하여 현재 조건은 비독립적이지만, 독립적 학자를 되도록 노력하는 학문후속세대로 통한다. 이를 학술진흥법 제7조에는 학문후속세대로서 대학생, 대학원생, 관련 기술 및 지식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자 등을 가리키며, 그들이 우수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승정, 「인문사회과학 전공 박사과정생의 학문적 정체성 발달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35권 제4호(2017), 320쪽.

자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은 갖고 있지 않다.¹¹⁾ 다시 말해 선언 수준으로서의 학문의 자유 보장과 연구자의 지원 정책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현재의 정부 주도 연구 지원 정책이나 대학 〈산학협력단〉 중심의 연구 정책은 애초 설립 취지와 달리 연구자의 자율성을 더욱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연구 생태계를 만들어 놓았다.¹²⁾

한편 교육환경의 악화는 시간강사를 포함한 연구자들에게 연구환경의 위기로 연결되고 있다. 2014년 대학원생 330,872명 중 석·박사학위 취득자는 9만5천7백36명이고, 이 중 박사학위 취득자는 12,931명(13.5%)을 차지하고 있다.¹³⁾ 2017년 대학원생은 326,315명이고 박사학위 취득자는 14,316명이다.¹⁴⁾ 2014년에 비해 2017년 대학원생은 1.4% 감원되었으나, 박사학위생은 10.7% 증가하였다. 박사학위생이 증원된 것은 전체 지식기반사회의 인재충원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학부 입학생은 5.4% 감원된 반면, 박사학위자가 늘어났다면, 대학원생들이나 신진박사들이 강의할 기회가 얼마나 사라졌는가를 수치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박사가 되기 위해, 또한 박사가 된 후에도 강의 하나 맡기 위해 대학원생이나 신진박사들이 얼마나 굴종적이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교수와 학생, 신진박사들 사이의 갑질¹⁵⁾ 문화에 대한 뉴스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박사가 되면 대부분이 비정규직 연구자가 되는 상황과 연동되어 연구 환경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는 2017년 연세대학교의 어느 공과대학원생의 텀블러 폭발물 사건¹⁶⁾으로도 짐작할 수

11) 정기오, 「고등교육과 연구개발의 행정관료제 극복과 학문의 자유 보장」, 『교육정치학 연구』 제23집 제2호(2016), 40쪽.

12) 위의 논문, 42쪽.

13) 이인규, 앞의 논문(2015), 19-21쪽.

14) 국가교육통계센터, 「13-1 고등교육기관개황(4)」, 『2017교육통계연보』.
(<http://kess.chedu.re.kr/index>)

15) '갑질'이라는 용어는 2010년경부터 출현하기 시작했으나 강준만 교수가 말하듯 우리 사회 도처에 만연해 있고, 대학 사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분단 이래로 사학 재단 이사장이나 설립자들은 교수나 교사에 대해, 교수나 교사는 학생에 대한 강압적 통제권을 독식하며, 진행하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 강준만, 『갑과 을의 나라』(인물과 사상사, 2013).

16) 2017년 6월 13일, '텀블러 폭발물'을 제작·배송한 연대 대학원생은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선고를 받았다. 이날 보도된 뉴스에 붙은 수많은 댓글에는 학생 동정론, 교수비난론 등이 동시에 올라와 있다. 「'텀블러 폭발' 연세대 대학원생 2심도 징역 2년 실형」, 《뉴시스》, 2018년 4월 25일자.

있다. 이러한 위태로운 연구 환경을 내버려둔 채, 지식기반사회를 적극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도 충분히 많은 새로운 학문 분야나 지식을 지식 선진국에서 수입해 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부분의 연구자마저 외국으로부터 충원된다면, 한국의 지식 식민지화를 넘어 학문재생산의 단절을 낳게 될 것이다.

이번 연구는 비정규직 연구자들의 연구 실태를 설문조사를 통해 짚어봄으로써, 이러한 상황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과제를 찾아보고자 한다.

Ⅲ. 조사 설계와 내용 및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기존의 선행 연구 중 대학원생 중심의 연구¹⁷⁾나 고등교육 기관의 교원 및 시간강사 현황 분석¹⁸⁾ 등이 참고할 만하다. 이러한 조사들은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생과 대학교원을 분리하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연구와 교육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반면, 이번 연구는 ‘연구자’라는 틀 속에서 연구와 교육을 동시에 접근하며 비정규직 연구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체적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학술단체협의회(이하 학단체)와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조사가 비정규직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주로 학단체와 한교조 소속의 연구자들이 모집단으로 되었다. 이러한 모집단 설정으로 인하여 이번 조사에 참여하게 될 응답자가 전체 비정규 연구자를 대표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즉 부분적으로 표집의 제한성으로 인해서 의도치 않았으나 과표집되거나 과소표집마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시론으로 출발하여, 조만간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제한된 연구 조건에 의해 설문 대상자는 처음 연구 설계단계에서는 200명으로 예상했으나, 설문 조사에 실제 응답한 사람은 115명(회수율

17) 이인규, 앞의 논문(2015); 인문학협동조합, 『대학원생 연구 환경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같은곳 펴냄, 2016); 한국연구재단, 『2018년도 청년과학자(대학원생, 포스닥 등)의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한국연구재단, 2018).

18) 이성은, 앞의 논문(2018).

57.5%)이었다.¹⁹⁾ 조사는 주로 설문지 조사에 의해 진행되었고, 조사 결과는 엑셀 프로그램으로 코딩 과정을 거쳐 자료를 돌려 현재의 단순 빈도표를 도출하였다.²⁰⁾

설문지는 38개 문항(상세 문항 포함 87개)으로 구성되었다. 38개 문항을 중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문항: 성별, 연령, 최종학력, 전공분야, 출생·성장지, 현 거주지, 부양 여부, 주거 상태, 소득 등.

둘째, 연구나 강의에 대한 일반적인 문항: 최근 3년간 연구 또는 교육 환경 만족도 등.

셋째, 대학 강의 및 노동 조건 관련 문항: 대학 강의 상황, 교육 환경 등.

넷째, 연구사업 관련 참여 및 전망 관련 문항: 대학이나 국공립, 사립 연구기관 경험, 한국연구재단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사업 참여 상황, 연구지원사업과 개인 연구의 상관관계, 연구비 부정 집행이나 연구 중 차별 경험 등.

다섯째, 비정규 교수 및 연구자의 지위 안정 방안 모색: 연구 및 교육 조건의 변화 전망, 비정규 교수 처우개선에 대한 의견, 한국연구재단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의 연구사업에 대한 의견, 한국연구재단의 특수목적사업에 대한 의견, 한국연구재단의 이공계 치중 학술진흥정책에 대한 의견, 학문후속세대나 신진박사, 비정규 교수에 대한 연구지원 정책 등.

이번 조사에서 첫째부터 셋째 질문 문항들은 교육 및 연구 환경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넷째와 다섯째 질문 문항이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 기간은 2018년 2월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정도 진행되었다.

19) 설문조사 응답률 57.6%는 일반적인 이메일 설문조사와 비교하면 그리 낮은 편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의 비응답자들 중 일부는 이런 조사에 따른 비정규직 연구자를 둘러싼 획기적 정책의 시행을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대조차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단순 비응답자들도 있었겠지만, 장기간 비정규직 연구자들의 관심과 체념이 깊은 현상과 비응답의 이유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20) 이 연구의 표집수가 115건밖에 되지 않아, 교차표를 구성하는데 통계학적으로 무리가 있어 결국 단순빈도표를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볼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기본 인적 사항

115명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기본 인적 사항과 경제적 상태로 나누되 우선 기본 인적 사항을 살펴본다.

표1-응답자의 기본 인적 사항

	기본 변수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74	64.3
	여	39	34.0
	무응답	2	1.7
나이별	20대	2	1.7
	30대	24	20.9
	40대	57	49.6
	50대	30	26.1
	60대 이상	2	1.7
최종학위별	박사	90	78.3
	박사수료	16	13.9
	석사	7	6.1
	기타	1	0.9
	무응답	1	0.9
전공별	인문학	46	40.0
	사회과학	55	47.8
	예술이론	6	5.2
	기초자연과학	2	1.7
	기타	4	3.5
	무응답	2	1.7
출생지 및 성장지	서울	46	40.0
	서울 외 수도권	13	11.3
	수도권 외 광역시	25	21.7
	기타	28	24.3
	무응답	3	2.6
현 거주지	서울	58	50.4
	서울 외 수도권	26	22.6
	수도권 외 광역시	23	20.0
	기타	7	6.1
	무응답	1	0.9
합 계		115	100.0

응답자 115명의 기본 인적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이 64.3%, 여성이 34.0%를 차지하였다.

둘째, 나이별 분포에서 40대가 49.6%로 과반수 가까이 차지했고, 50대 26.1%, 30대 20.9% 순이며, 50대가 비정규 연구자로서의 조사대상자의 1/4정도를 차지한 것은 비정규 교수·연구자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초로 이해할 수 있다. 그밖에 20대와 60대도 각각 2명(1.7%)씩 이번 조사에 참여했다.

셋째, 응답자의 최종학력별 분포를 보면 박사학위자 78.3%이고, 박사수료자 13.9%, 석사학위자 6.1%를 차지하였다. 박사학위자와 박사수료자가 92.2%를 차지한 것은 기대한 결과이고, 석사학위자의 경우에는 예술이론전공자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응답자의 전공별 분포를 보면 표집 자체가 사회과학 전공자 47.8%, 인문학 전공자 40.0%이며, 예술이론 분야 5.2%를 차지하여 최종학력별 분포와 일관성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외 기초 자연과학 분야의 경우 과학(기술)사 분야의 인문학적 성격으로 이번 조사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는 출생 및 성장지와 현 거주지를 나눠서 살펴보았다. 우선 출생 및 성장지별 분포를 보면 서울 40.0%, 수도권 외 광역시 21.7%, 서울 외 수도권(인천·경기) 11.3% 순이다. 현 거주지를 살펴보면 서울 50.4%, 서울 외 수도권 22.6%, 수도권 외 광역시 20.0% 순이다. 다시 말해 출생지에서 서울, 서울과 수도권 포함 광역시 출생 및 성장한 응답자가 3/4에 가까운데, 현 거주지를 보면 93%가 서울 포함 수도권과 광역시 거주자여서 응답자들의 대도시 밀집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2. 응답자의 경제적 상황

다음으로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경제적 상황을 살펴보도록 한다.(표2)

우선 응답자의 부양상태별로 보면 부양가족 있음이 52.2%, 피부양 상태 15.7%, 책임지는 가족 없음 32.2%로 나타났다. 이를 나이 변수와 관련지어 살펴보면 혼인적령기라고 할 수 있는 30대 이상에 해당하는

표2- 응답자의 경제적 상황

기본 변수별		빈도(명)	비율(%)
부양상태별	부양가족 있음	60	52.2
	피부양 상태	18	15.7
	책임지는 가족 없음	37	32.2
주거상태별	자가 주택	44	38.3
	전세	43	37.4
	반전세	6	5.2
	월세	11	9.6
	기타	9	7.8
	무응답	2	1.7
개인 연 소득별	1천만원 미만(월 평균 83만3천원 미만)	25	21.7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월 평균 83만3천원 이상-166만6천원 미만)	26	22.6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월 평균 166만6천원 이상-250만원 미만)	26	22.6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월 평균 250만원 이상-333만3천원 미만)	24	20.9
	4천만원 이상(월 평균 333만3천원 이상)	11	9.6
	소득 없음	3	2.6
가족 월 생활비	1백만원 미만	13	11.3
	1백만원 이상-2백만원 미만	28	24.3
	2백만원 이상-3백만원 미만	31	27.0
	3백만원 이상-4백만원 미만	25	21.7
	4백만원 이상	18	15.7
합 계		115	100.0

응답자가 98.3%인데, 부양가족이 있는 응답자는 반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피부양 상태나 책임지는 가족이 없는 상태이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1/3가량인 32.2%가 사실상의 독신 자립 생활을 하고 있음이 최근 30, 40대 남녀 중 3명 중 1명이 결혼할 의향이 없²¹⁾이 결혼을 포기하는 ‘비혼’층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추세와도 조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주거상태별로 보면 자가 주택 38.3%, 전세 37.4%, 반전세²²⁾와 월세를 합쳐 14.8%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현재 국민 전체 자가 주택

21) 「30-44세 미혼 3명 중 1명 “결혼할 의향 없다”」, 《국민일보》, 2018년 3월 13일자.

22) ‘반전세’란 전세와 월세를 합친 말로 오른 전세금만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말함.

보유 비율이 56.2%(23)인 것과 비교하면 이번 조사 응답자들의 자가 보유율은 현격하게 낮은 편이다.

셋째, 응답자의 최근 3년 평균 연소득(24)을 살펴보면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월 평균 83만3천원 이상 - 166만6천원 미만)과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월 평균 166만6천원 이상 - 250만원 미만)이 각각 22.6%이고, 1천만원 미만(월 평균 83만3천원 미만) 21.7%, 3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월 평균 250만원 이상 - 333만3천원 미만) 20.9%, 4천만원 이상(월 평균 333만3천원 이상) 9.6% 등으로 조사되었다. 3년간 연소득이 없었다는 응답자도 2.6%나 되었다. 2018년 3월 현재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 일반인의 평균 월소득이 285만원인데,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소득의 중간 분포는 월 평균 166만6천원 이상 - 250만원 미만이므로 이번 응답자들의 소득이 일반인의 소득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응답자가 44.3%이므로, 상당수의 비정규직 연구자들의 경제 상태가 빈한함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래 가족 월 생활비와 비교해 보도록 한다.

넷째, 1인가구 포함 가족의 한 달 생활비를 묻는 질문에 2백만원 이상 - 3백만원 미만 27.0%, 1백만원 이상 - 2백만원 미만 24.3%, 3백만원 이상 - 4백만원 미만 21.7%, 4백만원 이상 15.7%, 1백만원 미만 11.3% 순으로 응답되었다. 2백만원 미만 생활자가 35.6%가 되는 것은 다소 놀라운 일인데, '책임지는 가족 없음', 즉 1인 독신 가구로 추정되는 사람이 32.2%가 되는 것과 연결해 보면 이러한 결과는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한편 2013년 기준 서울거주 가구의 한 달 평균 생활비는 314만원(25)인데, 이번 응답자들의 평균값은 2백만원 이상 - 3백만원 미만에 위치하여 서울 거주자의 평균생활비에 비해서도 낮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의 경제적 사향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은 문화자본 면에서는 대단히 높은 편(박사학위자 78.3%)이지만, 소득 면에서는 한국 또는 서울 평균 시민보다도 낮아, 빈곤율이 높다. 또한 1인 가구로 추론되

23) 「10명 중 6명 빚져…… 평균 6,016만원씩», 《매일경제》, 2018년 3월 12일자.

24) 응답자의 조건 상 일부 연구교수를 제외하고 방학 중에는 급여가 없고, 학기에 따라 강의 시수가 차이가 있으므로 연소득으로 질문했음을 밝힘.

25) 「서울의 가구당 한 달 생활비는?», 《서울인포그래픽스》 제124호, 2015년 2월 16일자.

는 30, 40대 책임지는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32.2%로 나타나고 있다.

IV. 조사 결과 분석²⁶⁾

이 장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하여 연구나 강의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 대학 강의 및 노동 조건 관련 사항, 한국연구재단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 사업 관련 참여 및 전망 관련 사항, 비정규 교수 및 연구자의 지위 안정 방안 등을 모색하는 내용을 고찰할 것이다.

1. 연구나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되는 시기는 주로 최근 3개년, 즉 2015년부터 2017년이다. 이 시기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가 제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사업'을 착수하여 많은 대학에서 교육 환경이나 대학 구조가 바뀌는 시기였다.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많은 대학들에서 취업률과 4차 산업혁명, 지식기반사회를 중심으로 학과, 학부, 전공 편제가 바뀌고, 입학 정원을 자율적 또는 강제적으로 줄이게 되었다. 그런 과정에 대학의 강좌와 강의시수들이 감축되는 반면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시간강사와 대학원의 강의 등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2만명 내외²⁷⁾ 정도가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그러한 환경에 대해 이번 조사 참여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보도록 한다.

우선 '최근 3개년(2015-2017년)간 전반적인 연구 환경이나 조건이 만족스러운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73.3%가 불만족(아주 불만족 43.5%, 조금 불만족 27.8%)하다고 답한 반면, 6.1%만이 만족한다고 답했을 뿐이다.

다음으로 '전반적인 교육 환경이나 조건이 만족스러운가를 묻는 질문

26) 이후 결과 분석에서는 무응답은 누락시키고 단순빈도표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함.

27) 임순광,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비판」,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 방안,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2017). 앞에서 이성은의 연구결과에서 보듯 2011년 시간강사법 도입 이래로 2017년까지 시간강사가 3만 6천명 가까이 대학에서 퇴출되었다.

에 대해 69.6%가 불만족(아주 불만족 40.9%, 조금 불만족 28.7%)하다고 답한 반면, 6.1%만이 만족한다고 답하여 연구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같은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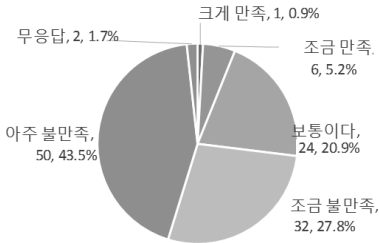


그림1- 최근 3년간 전반적 연구 환경 만족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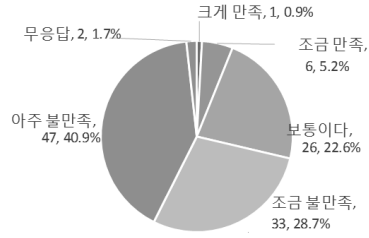


그림2- 최근 3년간 전반적 교육 환경 만족도 (단위: 명, %)

연구 환경과 교육 환경에 대한 불만족도 중에서 연구 환경에 대한 불만족도가 교육 환경에 비해 조금 높은 편이다.

다음으로 응답자들이 최근 강의를 했던 대학의 근로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2. 대학 강의 및 노동조건 관련 현황

115명 중 강의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있다는 사람은 90.4%(104명), 없다는 사람 9.6%(11명)로 답했다. 104명의 대학 내 직위를 살펴보니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3)

표3- 응답자의 대학 내 직위별 현황

대학 내 직위별	빈도(명)	비율(%)
시간강사	73	70.2
강의전담교수	6	5.8
겸임교수	3	2.9
(학술)연구교수	15	14.4
초빙교수	3	2.9
산학협력교수	1	1.0
기 타	3	2.9
합 계	104	100.0

최근까지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직위로 시간강사는 70.2%, (학술) 연구교수 14.4%, 강의전담교수 5.8% 순으로 응답되었다. 대다수가 시간 강사 직위임을 알 수 있다. 그 외 사실상의 시간강사로 분류되는 겸임교수나 초빙교수가 있고, 전임교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학술)연구교수와 산학협력교수 등이 있다. 교육부의 대학교원 현황 작성기준에 따르면 전임교원으로 기존의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함께, 연구전담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소 소속 교원(HK교수), 국·공립대의 기금교수 등도 전임교원으로 분류되고 있다.²⁸⁾ 이 분류에 따르면 위 표의 (학술)연구교수, 산학협력교수²⁹⁾ 등은 월급여 면이나 대학 내 지위 면에서도 일반 시간강사보다는 확실히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번 조사에 참여했던 것은 미래 신분의 불확실성이 이유라고 짐작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정규 연구자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이 최근 3년 간 한 학기당 평균 몇 개 대학에서 평균 몇 시간 강의했는가 하는 두 개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도록 한다.(표4)

표4-응답자들의 최근 3년간 한 학기 평균 출강 수와 평균 강의시수

출강 대학 수	빈도(명)	비율(%)	한 학기 평균 강의시수	빈도(명)	비율(%)
1개 대학	36	34.6	3시간 이하	15	14.4
2개 대학	61	58.7	4-6시간	48	46.2
3개 대학 이상	6	5.8	7-9시간	26	25.0
기타	1	1.0	10시간 이상	15	14.4
합 계	104	100.0	합 계	104	100.0

강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58.7%(61)가 2개 대학에서 강의를 해왔고, 응답자 34.6%가 1개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다. 한편 한 학기 평균 강의시수를 보면 4-6시간(주로 2개 강좌) 강의자 46.2%이고, 7-9시간(주로 3개 강좌) 강의자 25.0%이며, 3시간 이하(주로 1개 강좌)와 10시간 이상(4개 이상) 강의자는 각각 14.4%이다.

다음으로 강의하던 대학에서 해고 경험 유무와 해고 사유 인지에

28)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앞의 논문(2017), 160쪽; 김정숙, 「비정년트랙 전임교수의 삶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제23권 제2호(2013), 84쪽.

29) 산학협력교수는 2011년 개정 고등교육법 15조 ②항에 의해 전임교원으로 분류되었다.

대한 질문에서는 104명 중 37.5%만이 경험을 했다고 응답을 했고, 그 가운데 해고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고 사유를 들었다는 사람은 단 7명, 17%에 불과했다. 반면 '해당 대학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해촉했다'고 답한 사람은 53.7%에 달했다.

다음으로 응답자가 강의를 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 환경에 대한 일곱 가지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5점 척도(①매우 그렇다, ②조금 그렇다, ③보통이다, ④별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로 답하게 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①+②, ④+⑤를 묶어 그렇다, 보통이다/그렇지 않다고 재구성하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표5)

표5- 주로 강의하는 대학의 교육 환경 실태

항목	응답 범주(N=103) 단위: 명(%)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시간당 강의료가 너무 낮다	64(62.1)	26(25.2)	13(12.6)
대학에서 연구공간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	70(67.0)	11(10.7)	22(21.3)
개강시간에 학생들에게 비정규 교수라고 밝히는 편이다	56(53.3)	8(7.8)	39(37.8)
학생들이 해당 대학의 정규직 교수와 차별한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40(38.9)	20(19.4)	43(41.8)
매 학기 강좌를 배정받기 위해 해당 대학의 정규직 교수와 상의 한다	19(18.4)	13(12.6)	71(68.9)
많은 강의시간 때문에 학기 중에 연구논문을 발표하기가 쉽지 않다	42(40.7)	21(20.4)	40(38.9)
방학 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강의 외 부업(아르바이트)을 하는 편이다	47(45.6)	15(14.6)	41(39.8)

우선 대학에서 연구공간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것에는 67.0%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시간당 강의료가 낮다는 데에는 62.1%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많은 대학에 연구공간이 제공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개강시간에 학생들에게 자신을 비정규 교수라고 밝히는 경우는 과반수 정도이다. 학생들이 정규직 교수와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 많은 편이다.

'매 학기 강좌를 배정받기 위해 해당 대학(학과, 학부 등) 정규직 교수와 상의한다'는 질문에 단 18.4%만 그렇다고 응답했고, 반면에 그렇

지 않다는 응답이 68.9%이다. 현실적으로 교육권이 취약한 비정규 연구자들의 경우 해당 대학 정규직 교수가 배정해 주는 대로 받을 뿐 배정을 받기 위해 협의를 할 수 있는 경우란 드문 것으로 짐작된다.

강의 부담 때문에 연구논문 준비시간의 부족을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가 거의 비슷하지만 그렇다는 대답이 40.7%로 조금 높다.

방학 때 경제적 이유로 강의 외 부업(아르바이트)를 하는가하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조금 높아, 45.6%였다.

다음으로 소속되어 있거나 주로 강의하는 대학의 설립 주체 질문에 대해 국공립대 41.1%(46명), 사립대 55.4%(62명)으로 응답되었다. 이는 국가교육통계센터가 제공하는 『교육통계서비스』³⁰⁾의 대학 설립별 2017년 교원수, 국·공립대학 24.3%(16,239명), 사립대 75.7%(50,556명)와 비교할 때 이번 조사에서는 국공립대 소속의 응답자들이 다소 과표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비정규 교수(연구자)가 된 기간을 묻는 질문에 5년 이상 10년 미만 32.7%, 5년 미만 29.2%, 10년 이상 15년 미만 20.4%, 15년 이상 20년 미만 9.7%, 20년 이상 8.0%으로 응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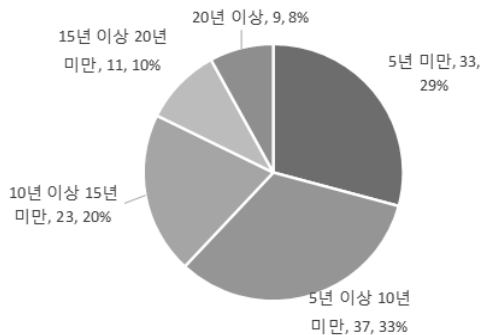


그림3-응답자의 비정규 교수 경력 (단위: 명, %)

3. 연구 사업 관련 참여 및 의식

이제부터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연구사업 참여 경험과 연구 환경, 인식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30) 국가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서비스」(2017)(<http://kess.kedi.re.kr/index>).

우선 국내 대학 연구기관이나 국공립 및 사립 연구기관에서 일해 본 경험을 묻는 질문(12번 문항)에 대해 있다 56.6%, 없다 43.4%로 응답했다(그림4). 한편 한국연구재단(이하 연구재단)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한중연) 등의 연구사업의 참여 경험을 묻는 질문(14번 문항)에는 있다 53.6%, 없다 46.4%로 응답했다(그림5).

12번 문항과 14번 문항에서 연구 사업 참여 시, 주된 지위를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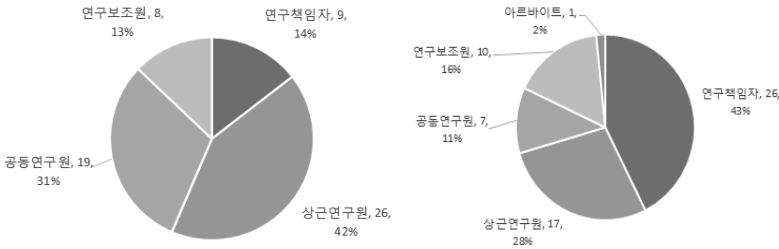


그림4-대학이나 국공립, 사립 연구기관의 연구지위 (단위: 명, %) 그림5-연구재단 등 연구지원사업의 연구지위 (단위: 명, %)

(그림4)의 질문에 대해서는 상근연구원 41.9%, 공동연구원 30.6%이며, 연구책임자는 14.5%인 반면, (그림5)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42.6%, 상근연구원 27.9%, 연구보조원 16.4%로 응답되었다. 연구재단 사업 참여에서 연구책임자 비율이 높은 것은 신진박사 연구지원사업 또는 박사후 연구지원사업이나, 과거에는 박사학위 준비생 연구지원사업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로 추론된다.

다음으로 연구재단이나 한중연 연구지원사업 참여 동기를 다각적으로 질문했다.(표6)

표6-연구재단이나 한중연 등의 발주 연구지원사업 참여 동기

항목	응답 범주(N=56) 단위: 명(%)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관심 있는 연구 주제이기 때문에	37(66.1)	13(23.2)	6(10.7)
연구업적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25(44.7)	16(28.6)	15(26.8)
경제적인 이유로	50(84.7)	7(11.9)	2(3.4)
주변동료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15(26.8)	5(8.9)	36(64.3)
대학이나 지인(지도교수 등)과의 관계로	23(41.0)	8(14.3)	25(44.7)

연구재단이나 한중연 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한 동기로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이 '경제적 이유' 84.7%, '관심 있는 연구주제' 66.1%, '연구업적 평가 대비' 44.7%, 대학이나 지인(지도교수나 선후배 등)과의 관계 41.0% 순이다. 관심 있는 연구주제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편이지만 경제적 이유에 대한 높은 응답률은 비정규 연구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짐작하게 하여, 비정규 연구자가 관심 있는 연구 주제의 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높여야할 과제가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지원사업의 주제와 연구자 자신의 연구주제와의 관련성 문제를 세 가지로 나눠 질문했다. 우선 연구재단이나 한중연의 연구지원사업 참여자에게 본인의 박사학위논문 주제와 연구지원사업 주제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연관성이 있다는 응답이 62.3%(크게 있다 26.2%, 있다 36.1%), 없다는 응답이 24.6%(별로 없다 19.7%, 아주 없다 4.9%)로 나왔다. 연관성이 있다는 응답이 2/3정도가 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연관성이 보통이나 없다는 응답이 1/3나 되는 것은 지나칠 문제는 아니다.

다음으로 향후 연구지원사업의 주제를 계속 연구하거나 이 주제와 관련된 단행권 등을 집필할 계획을 물었다. 이에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67.2%(크게 있다 37.7%, 조금 있다 29.5%), 없다는 응답이 13.1%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연구지원사업이 끝난 후에도 계속 같은 주제의 연구를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있다 72.1%(크게 있다 39.3%, 조금 있다 32.8%), 없다 11.4%로 응답되었다.³¹⁾ 다시 말해 이번 조사에 참여한 연구자들의 경우 연구지원사업의 주제와 자신의 본래 주제와의 연관성을 있다고 했고, 연구지원사업의 연구주제에 대해 관심도나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여기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지원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비 부정 집행이나 차별 경험에 대해 질문했다. 그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31) 대개 연구재단이나 한중연 연구지원사업은 단기 1년으로부터 장기 10년에 걸쳐 진행된다. 연구 기간이 길어지고, 연구자 자신도 나이를 먹음에 따라 대개 연구자들은 해당 연구용역의 주제에 대한 헌신이 깊어지기 마련이어서 초기의 전문 분야로 회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를 둘러싸고 단순하게 문제로만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 학문의 발전과 연구자 자신의 학문적 성숙을 위하여 깊이 있는 심화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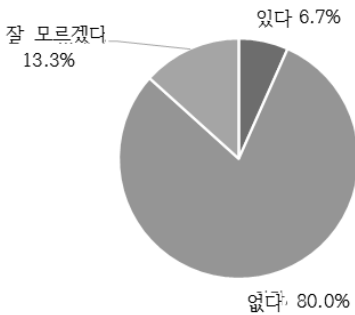


그림6- 연구지원사업에서 연구비 부정집행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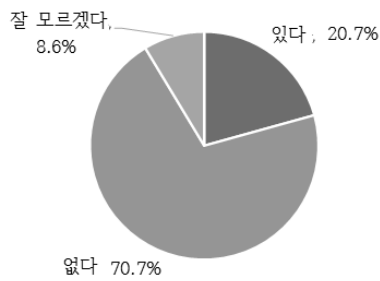


그림7- 참여 연구지원사업 중 차별대우 (단위: 명, %)

(그림6)에서 연구지원사업 진행 중 연구비에 대한 부정집행 목적의 경험에서 없다는 응답 80.0%, 있다는 응답 6.7%로 대다수가 연구부정집행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답을 했다. (그림7)에서 보듯이 연구 과정에서 차별대우는 없다는 응답이 있다는 응답보다 훨씬 많으나, 연구비 부정집행 목적 경험 있다는 응답과 비교하면 차별 경험의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이 응답 결과가 현실에 가깝다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본다. 다만 구체적 사례를 묻는 응답이나 학문발전방안을 둘러싼 자유 서술에서 연구비 부정에 대한 많은 진술이 적지 않았다. 몇몇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1: 연구지원사업 과정에서 연구비 부정 집행 경험

- ① 연구책임자는 가짜 영수증 발급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대학원생들을 지원하는 데 썼으나, 행정 직원들 중 일부는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처벌을 받았다.(No.085)³²⁾
- ② OO대 박사 시절 교수(연구책임자)가 공금으로 개인 식사 및 컴퓨터 구입 등, 좌우간 한국의 상황에서 제대로 된 연구업적이 나온다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본다.(No.094)

사례2: 연구지원사업 과정에서 연구자에 대한 차별 경험

- ① 공동연구를 하는데, 일은 하지 않고 성과만 자신이 한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이 있다. 문제제기를 했으나 상관은 그냥 덮고 넘어갔다. 그 이상한 연구원이 상관의 제자이기 때문이다.(No.007)
- ② 남성 연구자 우선적 배려(No.038)
- ③ 직급별로 차등급여와 대우가 격심하고, 연구환경 제공에 있어서도 차별적이다.(No.053)

32) 이하 서술에서는 응답자 115명에게 부여한 번호로서 서술자를 칭함.

사례 1, 2의 경험 서술은 한국의 연구 환경에서는 흔한 사례이며, 특히 공동연구 속에서 연구자들은 남녀, 사제기간 불평등을 포함하여 직, 간접적인 여러 가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4. 비정규 연구자의 지위 안정 방안 모색

비정규 연구자의 지위 안정을 모색한다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운 문제이다. 연구자의 지위 안정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도 주관적이고, 연구자 개인마다 선호도 다양할 것이다. 최소 박사학위 획득 후 5년 내외로 연구커리어를 쌓을 때까지 연구에 진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원 제도나 박사학위준비생이 학위논문 준비와 집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2-3년 정도의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최소한 연구자의 지위 안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자의 안정된 지위를 고민하게 되는 기본 출발은 연구자가 최소한의 안정된 상태에서 연구할 수 있는 상황의 부재로부터 시작한다.

우선 현 정부 하에서 연구 및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다각적으로 물었다. '매우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를 '그렇다'로 묶고,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를 '그렇지 않다'로 묶어서 응답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표7)

연구 및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해 가장 문제로 느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78.3%과 67.8%의 응답자들이 비정규 교수·연구자간 경쟁이 더 심화되고, 연구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5년의 '대학구조

표7-응답자들의 대학 교육 및 연구 환경에 대한 변화 진단

항목	응답 범주(N=115) 단위: 명(%)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무응답
비정규 교수·연구자간 경쟁 심화	90(78.3)	15(13.0)	8(6.9)	2(1.7)
비정규 교수·연구자의 연구 환경 악화	78(67.8)	20(17.4)	15(13.1)	2(1.7)
대학구조조정에 의해 교육·강의환경 악화	77(66.9)	25(21.7)	11(9.6)	2(1.7)
대학원 폐교(폐지)의 확대 가능성	76(66.1)	23(20.0)	14(12.1)	2(1.7)
기초 학문 분야의 축소	76(66.1)	21(18.3)	16(13.9)	2(1.7)
비정규 교수 차별 상황의 악화	71(61.7)	25(21.7)	17(14.8)	2(1.7)
진보적 학문 영역의 축소	55(47.8)	29(25.2)	29(25.2)	2(1.7)

개혁평가사업'에 이어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사업'과정에서 강좌 축소나 교육 과정의 변화에 따른 시간강사의 위축에 따라 강의나 연구 환경의 악화가 계속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연동하여 대학구조조정에 의해 교육·강의환경의 악화, 대학원 폐교(폐지)의 확대가능성, 기초 학문 분야의 축소는 직간접적으로 연구환경을 악화시키는 조건이 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진보적 학문분야의 축소 우려도 47.8%나 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기초 학문 분야의 축소 우려(66.1%)에 있다. 다시 말해 기초 학문 분야에 대한 위기는 인문사회과학, 기초자연과학 분야의 위축과 관련되고, 진보적 학문분야는 학문 다양성의 위기 문제와도 관련된다.

다음 질문에서는 비정규 교수·연구자의 연구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매우 필요'와 '조금 필요'를 '필요하다'로 묶고, '조금 불필요'와 '전혀 불필요'를 '불필요하다'로 묶어서 응답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표8)

표8-응답자들의 연구 및 교육환경 개선 방안

항목	응답 범주(N=115) 단위: 명(%)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무응답
비정규 교수·연구자를 책임자로 한 자율적 연구지원사업이 시행 및 확대되어야 한다.	107(93.0)	5(4.3)	2(1.7)	1(0.9)
비정규 교수 및 연구자들에게도 대학 운영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어야 한다	107(93.0)	69(5.2)	1(0.9)	1(0.9)
비정규 교수·연구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처우 개선과 제도 개선을 위해 행동할 필요가 있다.	104(90.4)	8(7.0)	1(0.9)	2(1.7)
대학 전임교원 100% 확보와 비정규 교수의 안정된 교육·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국공립과 사립대학 구분 없이 일정기준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	100(87.0)	9(7.8)	5(4.4)	1(0.9)
대학은 「대학설립·운영규정」상의 전임교원 확보율을 100% 준수해야 한다.	99(86.1)	10(8.7)	5(4.4)	1(0.9)
비정규 교수·연구자를 대학평의원회 ³³⁾ 에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한다.	99(86.1)	11(9.6)	3(2.6)	2(1.7)
정규직 교수가 되지 못하는 교수는 계약직 교수제도, 연구강의교수제 ³⁴⁾ 를 운영해야 한다.	98(85.2)	13(11.3)	3(2.6)	1(0.9)
비정규 교수·연구자에게도 총장 선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87(75.6)	17(14.8)	9(7.8)	2(1.7)

응답자들이 연구 및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해 가장 많이 동의하는 방안이 비정규 교수·연구자를 책임자로 한 자율적 연구지원 사업이 시행 및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93.0%)과 이들에게도 대학 운영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93.0%)이다. 다음으로 노동조합 가입을 통한 처우 개선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90.4%)이다. 그 다음으로는 국립립대와 사립대에 일정기준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87.0%), 전임교원 확보율 100% 준수와 대학평의원회에 비정규 교수·연구자 대표의 참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86.1%), 비전임, 비정규 교수에 대해서는 안정된 계약직 교수제도(연구강의교수제)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85.2%)이다. 이러한 방안에 비해 다소 동의 비율은 떨어지지만, 75.6%가 동의한 총장선출권에 대한 비정규 교수·연구자에 대한 인정도 있다. 응답자들이 대다수가 개선되어야 할 연구환경으로서 비정규 교수·연구자들의 자율적 연구지원사업의 시행 및 확대라고 응답한 점은 현 연구지원사업 방식의 커다란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연구재단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구지원사업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했다.(표9)

표9- 한국연구재단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구지원사업을 둘러싼 문제점

항목	응답 범주(N=115) 단위: 명(%)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무응답
한국연구재단 등의 연구지원사업에서 학위 논문을 앞둔 대학원생이나 신진박사에 대한 연구지원사업이 부족하다.	101(87.8)	8(7.0)	4(3.5)	2(1.7)
연구지원사업 선정에 있어서 정치적·이념적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98(85.2)	11(9.6)	2(1.7)	4(3.5)
연구지원사업이 대형화되다보니, 과제 선정률이 너무 낮다.	98(85.2)	11(9.6)	2(1.7)	4(3.5)
연구과제가 큰 대학이나 큰 연구기관에 치중되어 선정되고 있다.	96(83.4)	14(12.2)	2(1.7)	3(2.6)

33) 대학평의원회는 2007년 개정 사립학교법 제26조1에 의거된 대학 민주주의의 기구이지만, 아직 많은 대학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 제도가 비판받고 있고, 많은 교수들이나 대학구성원들이 재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34) 연구강의교수제도는 한교조의 자료를 참조바람.

심사기준이 지나치게 정형화되어 있어서 종합적인 평가가 결여되어 있다.	95(82.6)	15(13.0)	2(1.7)	3(2.6)
연구지원사업의 주제 선정, 심사과정, 평가 등의 제반 과정이 불투명하다.	89(77.4)	19(16.5)	3(2.6)	4(3.5)
제시된 연구과제의 주제 방향이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80(69.5)	23(20.0)	9(7.8)	3(2.6)
연구지원사업이 한국 학문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	76(66.1)	26(22.6)	10(8.7)	3(2.6)
연구지원사업 심사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75(65.2)	32(27.8)	4(3.5)	4(3.5)

응답자들이 연구재단이나 한중연의 연구지원사업과 관련되어 느끼는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문제는 신진박사나 학위논문 준비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부족(87.8%)이다. 다음으로 문제로 느끼는 사안은 연구지원사업 선정의 정치적 이념적 기준 적용(85.2%)³⁵⁾과 낮은 연구 과제 선정률(85.2%), 연구과제의 대형화에 따른 큰 대학이나 큰 연구기관 치중 문제(83.4%), 심사기준의 정형화에 따른 종합적인 평가의 결여 문제(82.6%), 연구지원사업의 주제 선정이나 심사과정, 평가 등의 불투명 문제(77.4%) 등이 높은 편이다. 또한 연구주제 방향이 정부 주도의 문제(69.5%), 연구지원사업의 한국 학문이나 고등교육 질적 발전에서 불확실한 기여 문제(66.1%), 심사자의 전문성 부족 문제(65.2%)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관련해서는 미래 지향적인 학문정책 수립을 위하여 정확한 사실 진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아무튼 위의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도 교육이나 연구 환경의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과 거의 일치하여 신진박사나 학위논문 준비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과 연구과제의 자율성에 대한 요구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재단의 대형 특수목적사업인 BK21, HK, SSK, 중점연구소 등 장기 대형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표10)

35) 연구재단 등의 연구지원사업 선정에 정치적·이념적 잣대가 작용했다는 인식은 학계에 널리 퍼져 있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는 데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전하는 여러 연구자들의 주장과 역사학 53개 학회의 주장에 힘입은 바 있다. (『역사학계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돼야』, 《연합뉴스》, 2017년 11월 6일자)

표10-응답자의 BK21, HK, SSK, 중점연구소 등 장기 대형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항목	응답 범주(N=115) 단위: 명(%)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무응답
연구행정 업무 처리나 잦은 연구평가 실시로 인하여 연구자의 연구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	94(81.7)	14(12.2)	2(1.7)	5(4.3)
연구종료 후 연구성과가 축적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93(80.9)	15(13.0)	2(1.7)	5(4.3)
장기 연구지원사업이라 해도 단계별로 탈락률이 높아 연구가 지속성 있고, 일관성 있게 진행되기 어렵다.	80(69.5)	22(19.1)	8(7.0)	5(4.3)
연구비 규모에 비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되는 연구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79(68.7)	26(22.6)	5(4.3)	5(4.3)
연구지원사업 진행과정에 연구자 개인의 연구 자율성이 제약을 받아, 연구의욕이나 창의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	79(68.7)	25(21.7)	5(4.3)	4(3.5)
이러한 연구지원사업은 학문 발전이나 국가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73(63.4)	26(22.6)	11(9.6)	5(4.3)
장기연구관리 시스템의 부실로 연구비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67(58.3)	29(25.2)	14(12.2)	5(4.3)

두뇌한국21(Brain Korea 21, BK21)사업은 1999년부터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대학원을 육성하여 대학의 연구력을 증진시키고 우수한 고등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며, 각 지역 소재 대학과 지역 산업을 연계시켜 특성화하고 지역 필요 우수 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다.³⁶⁾

인문한국지원사업(Humanities Korea)³⁷⁾은 2005년부터 인문사회와 기초과학의 분야별로 분리되어 시행되어, 2011년 인문사회 기초연구사업은 ‘인문사회 기초연구 지원 사업’, ‘인문학 진흥 사업’,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 사업’의 세 가지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³⁸⁾

또한 한국사회기반연구(Social Science Korea)는 2010년부터 사회과학 분야 학술연구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차세대 사회과학자를 양성하고

36) 김병주, 「BK21 사업 재정지원 정책의 정치학」, 『교육정치학연구』 제14집 제1호 (2007), 29쪽.

37) 인문한국지원사업의 모체는 1963년부터 시행된 ‘학술연구조성사업’이라고 한다. 오현석·김정인, 「이공계와 인문사회계 연구자의 연구활동 및 환경인식 차이분석: WCU, SSK, HK 사업 참여 연구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 제39권 제1호(2012), 209-234쪽.

38) 위의 논문, 213쪽.

국가와 사회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학제적·융합적 연구집단(think tank) 육성을 통하여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3단계 육성 전략을 채택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연구센터로 육성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³⁹⁾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이러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보면, 전반적으로 긍정적 태도보다는 부정적 태도가 월등히 높다. 가장 부정적인 평가로는 연구행정업무나 연구평가 실시 준비에 들이는 시간이 많아 연구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81.8%로 가장 높다.⁴⁰⁾ 이와 근소하게 연구성과가 축적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80.9%)도 상당히 높다. 다음으로 단계별 평가과정에서 탈락하여 일관성 있는 연구가 어렵다는 지적(69.5%), 연구 목적에 부합되는 성과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68.7%), 연구의 자율성과 창의성 제약(68.7%), 학문 발전이나 국가 발전의 기여가 어렵다는 지적(63.4%)도 적지 않다. 과반수의 응답이 장기연구관리 시스템의 부실로 인한 연구비 예산의 낭비문제(58.3%)도 지적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2009년 한국연구재단의 이공계 차중 연구 예산 집행 현실에 대한 문제와 대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표11)

표11-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정책에 대한 의견

항목	응답 범주	빈도(명)	비율(%)
이공계와 기초학문, 인문사회과학계 학문 분야 간의 불균형 완화를 위해 기초, 순수 인문사회과학 연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매우 그렇다	87	75.7
	조금 그렇다	23	20.0
	보통이다	2	1.7
	별로 그렇지 않다	-	-
	전혀 그렇지 않다	-	-
	무응답	3	2.6
한국연구재단이 응용 학문, 과학기술공학 중심으로 운영되어 기초학문,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이 취약하다.	매우 그렇다	81	70.4
	조금 그렇다	28	24.3
	보통이다	2	1.7
	별로 그렇지 않다	-	-

39) 위의 논문, 212-213쪽.

40) 연구절차의 공정성이나 엄정성으로 인해 연구자들이 연구행정가로 변질하게 되어 수단-목표 전치현상과 같은 전형적인 관료주의 문제가 연구지원사업에 만연되어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기는 커녕 연구 생태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기오, 앞의 논문(2016), 43쪽.

	전혀 그렇지 않다	-	-
	무응답	4	3.5
응용 학문은 시장 영역에서 육성할 수 있으므로, 연구재단을 포함한 국가적 연구지원사업은 기초 순수 학문 지원으로 특화되어야 한다.	매우 그렇다	61	53.0
	조금 그렇다	31	27.0
	보통이다	10	8.7
	별로 그렇지 않다	8	7.0
	전혀 그렇지 않다	1	0.9
	무응답	4	3.5
	합 계		115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응용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지원이 지금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매우 그렇다	16	13.9
	조금 그렇다	27	23.5
	보통이다	39	33.9
	별로 그렇지 않다	22	19.1
	전혀 그렇지 않다	7	6.1
	무응답	4	3.5
	합 계		115

연구재단의 이공계 치중 학술진흥정책 문제에 대한 응답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답이 적은 편이라 5점 척도에 따른 결과를 그대로 보고자 한다. 연구재단이 응용 및 과학기술공학에 치중되어 기초학문이나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이 취약하냐는 물음에 70.4%가 매우 그렇다, 24.3%가 조금 그렇다고 답하여 95% 넘는 응답자들이 치중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음으로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응용과학기술 연구 지원 확대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이다가 33.9%를 차지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답을 한 사람도 25.2%나 된다. 이공계와 기초학문-인문사회과학학문 분야간 불균형 완화를 위해 기초, 순수 인문사회과학 연구 지원 확대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75.7%, 그렇다를 합치면 95.7%가 된다. 다음 질문에서는 연구재단이 응용학문분야보다 기초순수 학문 분야 지원으로 특화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53.0%와 그렇다를 합치면 80%가 동의했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 인적 상황에서 보았듯이 응답자의 전공이 인문학 40.0%, 사회과학 47.8%라는 점을 고려할 때 편향이 있는 결과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심화연구를 통하여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문 분야, 인문사회과학 분야 연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박사학위논문 준비생이나 신진학자, 비정규직 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방식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표12)

표12-신진연구자 및 비정규직 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 방식

항목	응답 범주	빈도(명)	비율(%)
비정규 교수·연구자가 대학 연구기관 및 일반 연구기관에서 안정적, 장기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매우 그렇다	94	81.7
	조금 그렇다	18	15.7
	보통이다	-	-
	별로 그렇지 않다	-	-
	전혀 그렇지 않다	-	-
	무응답	3	2.6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준비생이나 신규 박사 학위자 혹은 비정규 연구자도 연구책임자로서 연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매우 그렇다	60
조금 그렇다		40	34.8
보통이다		9	7.8
별로 그렇지 않다		4	3.5
전혀 그렇지 않다		-	-
무응답		2	1.7
연구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과제보다 개인 과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매우 그렇다	53
	조금 그렇다	47	40.9
	보통이다	12	10.4
	별로 그렇지 않다	1	0.9
	전혀 그렇지 않다	-	-
	무응답	2	1.7
현재와 같은 연구재단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진흥사업단이 폐지되고, 새로운 연구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매우 그렇다	46	40.0
	조금 그렇다	33	28.7
	보통이다	25	21.7
	별로 그렇지 않다	8	7.0
	전혀 그렇지 않다	-	-
	무응답	3	2.6
합 계		115	100.0

네 가지 질문 항목 가운데에서 응답자들의 희망이 가장 큰 항목은 안정적 장기적 연구 제도의 도입으로서 매우 그렇다가 81.7%이고 그렇다를 합치면 97.4%이다. 다음으로 박사학위논문 준비생과 신진박사나 비정규 연구자의 연구책임자로서의 연구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52.2%가 매우 그렇다고 의견을 표했고, 그렇다를 합치면 87%이다. 연구 자율성 강화를 위해 공동과제보다 개인과제 확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46.1%, 그렇다를 합치면 87%이다. 현재의 한국연구재단이나 한국학중앙 연구원의 한국학진흥사업단의 폐지 후 새로운 연구시스템의 창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40%, 그렇다를 합치면 68.7%이다.

5. 응답자들의 비정규직 연구자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에게 비정규직 연구자의 안정화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 달라고 했는데, 115명 중 30명을 제외하고 85명이 서술했다. 한 줄의 서술도 있으나, 20줄이 넘는 상세 서술도 있다. 내용은 현재 비정규직 연구자를 둘러싼 문제점과 과제를 지적하였고, 나름대로의 다양한 대안들을 내놓고 있다. 한 가지 대안을 내놓는 응답자도 있었으나, 많은 응답자들이 현실적, 정책적 맥락에서 비정규 연구자의 안정화를 둘러싼 다양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 글에 인용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비정규교수·연구자에 대한 정부나 대학당국의 무시 또는 차별 정책에 대해 높은 분노감을 표출하는 연구자들이 적지 않았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교육과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피력했다.

비정규직 교수의 직업성을 인정받는 것은 첫째, 대학 스스로가 대학운명을 위해 비정규직 교수의 존재가 필요한 지금의 현실을 분명히 인정할 것, 둘째,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될 만큼의 급여가 보장될 것, 셋째, 직업적 안정성이 보장될 것 등 기본적으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교수자로서 비정규직 교수의 신분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다. 연구자로서 이들의 가치와 신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는 위의 세 가지 문제들과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No.58)

No.58의 입장을 갖고 있는 응답자들은 정규직화보다는 현실적으로 시급한 경제적 안정과 신분적 안정성을 희망하였다. 방학 중의 생계문제나 의료보험 포함 4대 보험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도 많았다.

다음으로 정부의 교수 정책 중에서 교수충원율을 100% 지키고 비정규 교수·연구자의 정규직화, 또는 무기한 계약직화, 연구강의 교원화 등으로 집약된 의견도 많았다.

다음으로 연구의 안정성을 위한 연구 환경이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구지원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있었다. 신진연구자나 비정규직 연구자가 장기적으로 연구책임자, 또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연구사업이 많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별 학교 차원에서 감당할 수 없다면 한국연구재단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의 연구비 지원 조직에서 비정규 교수·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사업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연구에 대한 의지와 욕구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활용에 대한 비좁은 문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일찍 소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No.34)

사실 3년 정도의 짧은 연구 기간으로는 연구도 안정적 생활도 곤란하다.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은 공동사업 위주의 연구지원사업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이벤트적인 연구성과(No.2)로 끝나는 일이 많아 비판적인 입장이 많다. 또한 응용학문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기초학문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들도 있다. “기초학문분야를 무엇으로 선정하느냐가 문제인데, 차라리 ‘소외’기초학문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도 좋아 보임. (인문학진흥사업은 너무 ‘대중인문학’쪽으로 돈이 흘러들어가서 학문발전에는 저해되었다고 생각함) 어떠한 학문에 시장이 아닌 국가가 지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토론이 선행되어야 …… (No.23)”고 하여, 연구 지원 정책이나 연구 환경 조성에 연구자들이 개입하여야 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학문후속세대, 즉 신진학자나 학위논문 준비생들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들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지금 대학원에서는 석사, 박사 학위자들의 진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대학 당국에서는 학생들을 곧 등록금으로 보고 무책임하게 입학 시켜서 2, 30대를 소비하게 만들고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 학진(한국연구재단 의미)에서 일 년에 한 번 신진연구자나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을 한다. 일반적인 박사 과정연구자들은 어느 쪽도 자격이 안 된다. 그러면 본인 연구를 하기 위해 교수님에게 프로젝트 제안을 해야 하고 연구실 내에서 이미 경쟁이 붙는다. 물론 이걸 교수님이 마침 그 해 본인의 연구 주제가 없을 때 경우다. 연구의욕이 넘치시는 지도교수님 밑의 박사 과정 제자들은 본인의 관심 주제를 사비를 들여 연구해야 한다. 사회과학은 실험 장비나 컴퓨터를 이용 안하니 장비 문제가 없다고 보통 생각하는데 사회과학에서도 실험 연구를 한다. 보통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기 때문에 그에 적절한 사례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박사 수료 신분으로 강의하면서 감당하는 것은 사실

매우 힘든 일이다.(No.74)

현재 한국에서는 박사과정(수료)생들이 연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석·박사 과정생 및 박사후과정생, 계약교수 등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인 연구 여건 조성으로 시작한 BK21사업에는 164개 대학, 564개 사업단 78,337명의 석·박사 과정생이 참여하였다⁴¹⁾. 연평균 전체 대학원 학생 대비 석사과정생은 14% 내외, 박사과정생은 20% 내외가 참여하여 연구조건에서 참여 학생과 비참여 학생 간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⁴²⁾ 더 심한 문제는 BK21(플러스) 사업을 둘러싸고 연구사업비가 부당하게 집행⁴³⁾되는 등 연구사업비를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연구환경이 교수 갑질, 대학 갑질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도 되었다.

V. 맺음말

이번 조사에 참여한 115명의 비정규직 연구자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하여 비정규직 연구자들이 기대 이하로 경제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로서 반드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일 순위로 보지 않고 연구자로서의 안정된 조건의 확보를 우선시 했다. 나아가 학문재생산을 위한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연구환경 조성을 우선시 했다는 점이 이번 연구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조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15명의 인적 구성을 보면, 성별은 남녀 각각 64.3%, 34.0%이며, 나이별로는 40대가 49.6%로 가장 많고, 최종학력별로는 박사학위자 78.3%이며, 전공별로는 사회과학과 인문학 각각 48.3%, 40.0%이다.

둘째, 115명의 경제적 상태는 2018년 3월 현재 한국 일반인의 평균 월소득이 285만원인데 반해 이번 응답자들의 소득 중간분포는 월 평균

41) 김병주, 앞의 논문(2007), 32쪽.

42) 위의 논문, 33쪽.

43) 「17개대 BK21플러스 장학금 5억 3000만원 부당지급」, 《한국대학신문》, 2017년 11월 7일자. (이러한 문제는 1주기 BK21사업에서도 비리가 끊이지 않아, 당시에도 이 사업이 뿌리째 흔들렸다. 「두뇌한국 〈BK21 프로젝트〉 뿌리째 흔들」, 《헤럴드경제》, 2006년 8월 3일자.)

166만6천원 이상-25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조사 참여 비정규연구자들의 소득이 일반인들의 소득보다 낮다.

셋째, 최근 3개년(2015-2017년)간 전반적인 연구 환경이나 조건에 대한 만족도에는 73.3%가 불만족을 표했고, 전반적인 교육 환경이나 조건에 대한 만족도에도 69.6%가 불만족을 표하여 교육 환경보다 연구 환경에 대한 불만도가 조금 더 높다. 조사 참여자들의 직위로는 시간강사 70.2%, (학술)연구교수 14.4%, 강의전담교수 5.8%이다. 또한 이들은 최근 3년간 한 학기 평균 2개 대학에서 4-6시간 강의를 하고 있다. 강사료는 62.1%가 낮다고 응답했고, 방학 때 경제적 이유로 강의 외 부업을 한다는 응답자가 45.6%였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비정규 교수 경력으로는 5-10년 사이가 32.7%, 5년 미만 29.2%, 10-15년 20.4%, 15년 이상 17.7%였다.

넷째, 최근 3년간의 연구 사업 관련된 질문에서 대학이나 국공립, 사립 연구기관의 연구상의 지위는 상근연구원 42%, 공동연구원 31%, 연구책임자 14%, 연구보조원 13%이다. 한국연구재단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사업진흥단 연구용역사업에서의 연구지위를 보면 연구책임자 43%, 상근연구자 28%, 연구보조원 16%, 공동연구원 11% 등으로 조사되었다. 즉 대학 등의 연구기관의 연구사업보다는 연구재단들의 연구용역사업에서 비정규 연구자들이 책임연구자가 되는 기회가 좀 더 있는 반면, 대학 기관에서 비정규 연구자들의 연구 지위는 더 열악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연구재단이나 한중연 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한 동기로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이 '경제적 이유' 84.7%, '관심 있는 연구주제' 66.1%, '연구업적 평가 대비' 44.7%, 대학이나 지인(지도교수나 선후배 등)과의 관계 41.0% 순이다.

여섯째, 비정규 연구자의 지위 안정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서는 앞으로의 대학 교육 및 연구 환경에 대한 전망 진단에서 교육 및 연구 환경의 악화를 내다보는 부정적인 의견이 평균적으로 2/3정도이다. 연구 및 교육 환경 개선 방안에서 가장 지지가 높은 의견으로는 비정규직 연구자들에게도 연구지원사업에서 책임성, 자율성을 보장해달라는 주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공동연구에서는 책임연구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일곱째, 연구재단이나 한중연 연구지원사업을 둘러싼 많은 문제제기가 있는데, 그 중 가장 불만이 많은 문제 역시 학위논문 준비 대학원생이나 신진박사와 같은 청년연구자들을 위한 연구지원사업이 부족한 점이다. 한국 학문질벽을 막고, 학문재생산 구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한국 학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점에 대한 전향적 노력이 시급하다.

나아가 연구재단의 학술진흥정책에 있어서 이공계와 기초학문, 인문사회과학계 학문분야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응용학문이나 과학기술공학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기초학문,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고, 특히 연구재단은 기초 순수 학문 지원이 특화될 필요가 있다고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비정규직 연구자들의 어려운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열악한 연구 환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열악한 연구 환경 속에서도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자기 자신보다는 학문후속세대의 심각한 연구환경에 대한 통렬한 지적이 많아, 한국 학문공동체 회복을 위한 통찰적인 인식을 보였다. 또한 지식기반사회의 성숙을 위해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 잡힌 지원정책이 절박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거듭 언명하듯이 115명이라는 제한된 표본 상황에서 진행되어 시론적 성격을 면하기는 어렵다.⁴⁴⁾ 그러나 한국 학문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학문공동체의 주체들이 책임성, 자율성을 갖는 것이 기본임을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었다. 학문 정책이 교육이나 행정 관료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한 한국 학문의 창의성, 민주성, 자율성, 통찰성을 갖춘 학문의 자유는 보장되기 어렵다. 늦었지만, 기초학문의 토대를 튼튼히 하는 바탕 위에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융합학문을 바텀업 식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 줘야 한다. 또한 학문후속세대들이 안정되게 학위논문을 쓸 수 있고, 신진연구자들이 충분히 연구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학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고, 학문의 발전은 교육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두터운

44) 이번 연구는 시론적 성격이 강하다. 조만간 기회가 된다면 비정규직 연구자의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의 보다 생생한 목소리, 비정규직 연구자라는 현상으로부터 각 연구자 분야별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한발 나아가 연구거버넌스 구성을 통하여 다양한 비정규직 연구자들이 정부 연구정책 의사결정 피드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지식층을 이뤄나갈 수 있다.

현재 한국 학계는 학문재생산 위기에 서 있다. 이대로 학문절벽의 시대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위기를 딛고, 새로운 학문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한국 연구 환경과 학문 체계와 정책을 어떻게 리셋 할 것인가? 한국 학문이 수입 지식과 수입 연구자로 다 채워지기 전에 늦었지만 이제라도 한국 학문과 연구자를 살리기 위한 국가의 학문 정책과 제도적 노력이 시급하다. 정부 주도의 탑다운 방식만의 학문 정책이 아니라, 연구자들의 전문성을 회복시키고, 창의성과 자율성을 높여 학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텀업 방식이 국가 학문 정책에 깊이 결합되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연구 지원방식, 즉 중·대형 연구지원사업이나 대학 산학협력단의 관료제적 연구 지원방식으로부터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강조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지원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최첨단 과학기술을 중시하며 이공계에 강조를 둔 연구 지원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해야 한다. 인문사회, 자연과학 등의 기초학문을 탄실히 다지면서 과학기술의 성장을 결합시켜야 한국 사회에 부응하는 학문을 성장시킬 수 있고, 한국 국적을 단 학문들로서 세계와 미래와 소통하며 긴 호흡으로 학문을 빚어나갈 수 있다. 정규직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연구자들도 창의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정된 연구 환경을 만들어 줘야만 지속가능한 학문재생산 구조가 살아날 수 있고 학문절벽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309동1201호,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 은행나무, 2015.
- 강준만, 『갑과 을의 나라』. 인물과사상사, 2013.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1차 의견수렴』. 같은곳 펴냄, 2017.
- 김경혜·장동열,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심층분석 리포트』. 서울연구원, 2016.
- 안삼환·강내희·심광현·김정인, 『인문학 활용 국가발전전략 수립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총서, 2005.
- 이성은,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및 시간강사 등 현황 분석』.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 2018.
- 이인규,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5.
- 인문학협동조합, 『대학원생 연구 환경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 인문학협동조합, 2016.
- 한국연구재단, 『2018년도 청년과학자(대학원생, 포스닥 등)의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연구재단, 2018.
- 황용수 외,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 연구). 2003.

2. 논문

- 김병주, 「BK21 사업 재정지원 정책의 정치학」. 『교육정치학연구』 제14집 제1호, 2007, 29-50쪽.
- 김승정, 「인문사회과학 전공 박사과정생의 학문적 정체성 발달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35권 제4호, 2017, 317-345쪽.
- 김정숙, 「비정년트랙 전임교수의 삶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제23권 제2호, 2013, 81-119쪽.
- 김종호·김세훈·황필선, 「국가연구개발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아태연구』 제16권 제1호, 2009, 33-57쪽.
- 오현석·김정인, 「이공계와 인문사회계 연구자의 연구활동 및 환경인식 차이분석: WCU, SSK, HK 사업 참여 연구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 제39권 제1호, 2012, 209-234쪽.
- 문선재·강승호·임용순, 「한국 고등교육기관 목표의 분석연구」. 『고등교육연구』 제7권 제2호, 1995, 99-126쪽.
- 정기호, 「고등교육과 연구개발의 행정관료제 극복과 학문의 자유」. 『교육정치학연구』 제23집 제2호, 2016, 33-53쪽.

3. 사이트

- 국가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서비스』. 2017 (<http://kess.kedi.re.kr/index>).
- 『고등교육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074&efYd=20180529#0000>).
- 『학술진흥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3513&efYd=20161130#0000>).
- 『헌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4. 기사

- 「강사법 시행 다시 초읽기」. 《한국대학신문》, 2017년 9월 3일자.
- 「두뇌한국 (BK21 프로젝트) 뿌리째 흔들」. 《헤럴드경제》, 2006년 8월 3일자.
- 「서울의 가구당 한 달 생활비는?」. 《서울인포그래픽스》 제124호, 2015년 2월 16일자.
- 「서울대 공대 대학원 미달…… 젊은 연구자들이 흔들린다」. 《서울경제》, 2018년 6월 28일자.
- 「쪼그라든 R&D 지원, 글로벌 시장 고려해 지속적으로 늘려야」. 《전자신문》, 2018년 4월 17일자.
- 「'팀블러 폭발' 연세대 대학원생 2심도 징역 2년 실행」. 《뉴시스》, 2018년 4월 25일자.
- 「10명 중 6명 빚져…… 평균 6,016만원씩」. 《매일경제》, 2018년 3월 12일자.
- 「17개대 BK21플러스 장학금 5억3000만원 부당지급」. 《한국대학신문》, 2017년 11월 7일자.
- 「30-44세 미혼 3명 중 1명 “결혼할 의향 없다”」. 《국민일보》, 2018년 3월 13일자.

5. 기타

- 김귀옥,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 방안,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2017.
- 임순광,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비판」.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 방안,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2017.
- 최은옥, 「대학 구조개혁 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 방안,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2017.
-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외, 『‘박근혜표’ 대학평가 즉각중단을 위한 대학과 시민 단체 대토론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2017.

국 문 초 록

최근 한국에서는 학문재생산이 어려운 상황, 즉 학문절벽의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학령인구 급감 상황과 함께 정부 주도의 대학구조개혁정책으로 대학 규모가 줄어들면서 시간강사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학원생이나 신진박사들도 강의 기회를 얻는 게 어려워지고,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연구의 기회는 더욱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연구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비정규 연구자 115명을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조사했다. 즉, 최근 3년간 그들의 교육 및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그들이 참여한 연구사업에서의 지위, 한국연구재단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한 동기, 연구 과정에 문제점과 연구 전망, 비정규 연구자의 지위 안정화 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그들이 요구하는 연구 환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현재 BK21, HK, SSK 등과 같은 대형 연구과제보다는 중소 규모의 연구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지속가능한 학문재생산을 위해서는 대학원생이나 신진박사들이 안정되게 연구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나아가 한국연구재단은 응용학문보다는 기초학문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부 주도의 탑다운식 관료주의적 연구정책은 이제 바텀업식 자율적 연구정책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미 늦었지만, 이제서나마 한국 학문이 창의성과 자율성이 가능하도록 연구 정책은 방향 전환을 해야만 한다.

투고일 2018. 7. 3.

심사일 2018. 7. 19.

게재 확정일 2018. 8. 27.

주제어(keyword) 학문재생산(academic reproduction), 학문절벽(academic deadlock), 비정규 연구자(temporary researcher), 연구의 안정화(stabilization of research), 바텀업 연구정책(bottom-up research policy), 탑다운 연구정책(top-down research policy)

A survey on the stabilization policy of temporary researchers in the age of academic deadlock

Kim, Gwi-ok

Recently, the situation of the academic deadlock is imminent, in which academic reproduction becomes more and more difficult. With a sharp decline in the number of school-age children, the state-led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policy has managed to shrink the size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which is, in turn, making it harder for many temporary researchers, graduate students and new doctors to have opportunities to teach or to research. Being pushed to participate in research projects mainly for economic reasons in areas that are somewhat distant from their interests and expertise, these temporary researchers find it difficult to engage in creative and progressive researches.

In order to closely examine this situation, a questionnaire-based survey is conducted with 115 temporary researchers who do not have a stable research position. The focus of the investigation lies on the status of their education and research during the last three years, their research circumstances in the research projects fund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nd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problems and prospects of the research process, and how to stabilize the status of temporary researchers.

To sum up the participants' responses, firstly, temporary researchers should be allowed more autonomy in their research. Secondly, more small-and medium-sized studies need to be implemented than large ones currently initiated under such drives as BK 21 (Brain Korea 21), HK (Humanities Korea), and SSK (Social Science Korea). Thirdly, for sustainable academic reproduction, a progressive approach should be adopted to ensure stable research among graduate students and young scholars. Furthermore,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should shift its focus to increase support for basic studies over applied ones.

Now, the government-initiated top-down bureaucratic research policy should be changed to a bottom-up autonomous research policy. This is because, in general, the researchers themselves tend to have a better idea of research prospect and methodology than the bureaucrats. It is long overdue, but the research policy must be altered to allow creativity and autonomy for academic studies in Korea.